

‘교권보호국’ 현실화 논의... 현장은 “실효성 의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열풍에 ‘교권 보호’ 공론화 교권 침해 현실 공감대 늘며 ‘교권보호국 신설’ 급부상 도내 교원단체들 “학교 현장서 체감 가능한 정책 필요”

교권 추락 등의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면서 현실에서도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현장에선 교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반기면서도, 관련 논의의 실효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드라마 ‘참교육’은 악성 민원, 학교 폭력, 비리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현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렸다. 그 중심에는 교육부 산하 가상 다. 문제를 빛는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은 가해자를 강하게 응징하며 ‘참교육’한다. 극중 해결책이 자극적이고 폭

력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교권 침해 등 현실 문제를 조명하며 공감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드라마 흥행에 맞물려 교권보호국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수면 위로 꺼내졌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한 데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교권 회복 문제는 단순히 조직 신설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정훈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장은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강하다”고 했다. 그동안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등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책 법으로 갔을 때는 교사 혼자 감당해야 될 영역이 9할 이상”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장 회장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교실 끝에 있는 교사 한 명까지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 한정우 위원장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은 교사에게 ‘우리가 방패가 되면 돼’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라마 속 교육부와 교권보호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과 달리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회의감도 있다.

현경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면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계 회복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점점 줄고 있다. 교사 정원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교육부는 자체 결정 권한이 없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등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선 피해를 입은 교사가 되레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거나 체협학습 시 안전 책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 전까지는 교육감의 시간이다. 교육감이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보완 장치를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발로 뛰며 지역 공동체 치안 실현할 것”

이화섭 신임 서귀포경찰서장 16일 기자간담회서 계획 밝혀



이화섭 서귀포경찰서장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우선 심야 시간 등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를 파악해 접근하겠다”며 “서귀포시 내 노인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생활을 시작한 제주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 의미가 큼니다. 서귀포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치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화섭(56) 신임 서귀포경찰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서장은 임기 내 역점 추진 사항으로 ▷고령 운전자·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노쇼 등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및 홍보 ▷농수산물 절도 피해 예방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및 범죄 예방 ▷지역 공동체·자율방범대 등과 공동체 치안 실현 등을 꼽았다.

이 서장은 “서귀포지역은 감귤 농사 등 농사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분이 적잖아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고령 운전자 사고 문제는 비단 서귀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귀포시와 제주경찰청 등과 정책적으로

농산물 절도 사건 예방을 위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도 강조했다. 이 서장은 “지역주민들이 특정 시기에 어떤 농산물 절도 범죄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신 만큼 지역 공동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범죄를 막겠다”고 했다.

이 서장은 또 “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지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순찰대를 운영해 기초질서 위반 및 범죄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코스모스 반겨주는 길 16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의 도로변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예산 대폭 확대”

제주시, 7억2000만원 투입 노루망 등 설치 지원

제주시가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해 피해농가 등을 전폭 지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뤄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현황은 농가 596개소, 면적 4.1km,

예산 14억6300만원이다. 연도별 지원 농가·면적·예산은 ▷2024년 187농가·1km²·4억4700만원 ▷2025년 123농가·0.5km²·2억9800만원 ▷2026년 286농가·2.6km²·7억1800만원 등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야생동물 피

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286농가를 대상으로 노루망, 조수류 퇴치기 등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신청 농가 대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 이를 개선해 올해 7억1800만원(국비 2억70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 나머지 자부담 20%)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시는 현재 114농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해 2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사업을 추진 중인 172농가에 대해서는 수확기 이전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포기 농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후순위 농가를 대체 선정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정부 교육교부금 배분 개편 논의 협의 없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당선인 간담회’서 우려 표명

15일 세종시 협의회서 진행

전국 교육감 당선인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지난 15일 세종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이 발표됐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 교부금을 초·중·고뿐만 아니라 영유아·대학까지 넓히는 방안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초·중·고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국 교

육감들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AI 교육 전환, 학생 안전, 교권 회복, 교육 자치 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교부금 산정 방식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바꾸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교육감 당선인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간담회도 열렸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제주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혜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FTA활용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FTA활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FTA활용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면?

제주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

각종 원산지증명서(C/O) One-Stop 서비스 제공!

상담

신청

발급

제주 FTA통상진흥센터
☎ 064) 759-2577

2026년 중점 지원사항

- 기업 현장방문 FTA 컨설팅
- 해외 바이어 현지 FTA 컨설팅
- 전문가 수출 컨설팅
- 원산지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지원
- FTA 설명회 및 교육
- 수출기업 수출·판로 지원프로그램
- FTA 상담실 운영